

21世紀는

인류는 해양을 과거에는 단순히 어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교통의 수단으로만 이용했었으나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그 이용을 다변화해가고 있다. 1960년 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Frontier이다」라고 주장한 이래, 미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양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해양개발을 국가전략의 중요과제로 정해 해양자원개발이용, 심해저조사 연구 등의 각종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체제를 갖추어 왔다.

최근 해양개발을 둘러싼 정세를 살펴보면, 우선 근년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해양개발의 가능성의 비약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물질적인 층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층족을 바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 대한 개발요청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됨과 동시에 지구가 본래 갖고 있는 정화능력 등의 유한성에 관한 인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근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등과 같은 지구 환경문제는 인류의 사회경제활동이 종래와는 달리 자연이 지니고 있는 조절 능력을 위협하여 자연을 변화시킬 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이렇게 인류의 사회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

연의 제현상기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류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해양은 그 막대한 열용량 등으로 대기-해양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기후 변동에 커다

海洋

革命時代

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가스의 흡수 및 고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못한 점이 많다.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제현상의 기구 규명을 추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또한, 유류오염등 해양오염의 실태파악, 영향예측 등을 위해서는 해양의 제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데이터는 인류의 지적자산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국제적인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도 미지의 해양실태 규명에 임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개발은 육상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해양의 제현상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의 부분도 많다. 따라서 해양개발이 실용화되기까지에는 해상조건의 파악에서 시작하여 기술개발을 거쳐 실용설비를 완성시킬 때까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며,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고,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해양생물 자원이나 희귀금속, 석유개발 등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에 서서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안역의 이용도 장기적인 관점에 서서 체계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자연, 사회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분야의 해양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사연구체제, 정보, 자금, 인재, 종합추진체제 등의 기반정비는 중요하다.

해양관측·조사연구에 있어 우리나라는 해양관련 정부부처에서 각종 관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국제적인 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연구분야에서도 경계영역의 연구나 특수기기 혹은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연구자의 연구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정비는 모든 분야의 해양개발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하며, 현재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스템의 체계적인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보교환의 촉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 海洋행정 一元化로 具現

이러한 조사연구체제나 정보정비를 포함해서 각종 해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자금확보나 인재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금확보는 모든 분야의 해양개발을 추진하

는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국제공헌을 위한 조사연구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이 추진하는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으로서 세제면, 금융면에서의 지원조치가 각 분야에서 도입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들 시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면에서는 각종 교육기관, 연수제도, 자격인정제도 등에 의해 인재양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양의 실태규명면에서 국제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양개발을 뒷받침하는 각종 기반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망에 선 기본적인 추진방안에 근거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해양개발에 관계된 각 부처간에서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해양행정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13개부 2개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행정적으로 주관 담당할 행정단위가 미약하였으며 인력 및 예산의 투자효율성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종합적인 해양행정의 부재로 인해 국가의 해양기술 개발목표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처별 기능의 분담에서 혼란이 오고 업무의 중복현상이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속히 해양행정의 일원화를 꾀해야 할 것이며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폴격으로 한 해양부의 설립은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를 해양혁명시대로 맞이하도록 하자.